

## 신용협동조합법

### <목 차>

- 1.거액여신 규제 근거
- 2.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
- 3.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 4.법정적립금의 사용요건 완화
- 5.업무보고서 제출의 법적근거 마련 등
- 6.중앙회 임원 중 선출직 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윤송이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983
	과장	김종훈		이메일	2081001@mail.go.kr

2021. 03. 18.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거액여신 규제 근거									
	2.규제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5 ~ 2021.05.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현행) 상호금융업권의 거액여신*은 34.9조원('20년말)으로 총여신(401.0조원)의 8.7% 수준이며, 거액여신 한도가 있는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p> <p>* 거액여신을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의 : ('20년말 기준) 거액여신 한도 초과 조합은 139개 조합(전체 조합의 6.2%, 신탁이 118개(84.9%)로 가장 많고, 수협 12개(8.6%), 산림조합 9개(6.5%) 順)</p> <p>** 타 금융업권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20.9말) : (은행) 4.7%, (저축은행) 1.7%</p> <p>- 최근 기업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거액여신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p> <p>* 지방경기 침체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 : ('18말)1.64→ ('20말)2.23%</p> <p>** 기업대출 증가율(%): ('15)27.0→ ('18)28.5→ ('20)28.1</p> <p>○ (개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은행, 저축은행과 동일)</p> <p>* 상호금융의 경우 거액여신 한도를 설정할 때 규모가 작은 조합을 감안하여 총자산기준을 병행하여 설정</p>									
	7.규제내용	○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p>○ 신탁, 농수협, 산림조합</p>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신탁, 농수협, 산림조합</td><td>2,227개 조합</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탁, 농수협, 산림조합	2,227개 조합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탁, 농수협, 산림조합	2,227개 조합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거액여신 규제 도입을 통해 상호금융의 건전성 강화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9,524.89		19,524.8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9,524.89	0	2,942.57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 ----- ----- ----- ----- ----- ----- ----- ----- ----- ----- ----- -----.
<신 설>	② 조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이하 “거액 대출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조합의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25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액·기업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전체부실로 전이 우려

- 또한 지역신협이 대출 영업구역 광역화\* 등으로 향후 거액여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리스크 관리수단 부재

\* 226개 시·군·구 → 10개 광역권

□ 거액 편중여신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협법 개정이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거액여신 규제 도입
	내용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
규제대안2	대안명	거액여신 규제 미도입
	내용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지 않음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거액 편중여신 리스크 관리 가능	거액여신 한도를 넘는 여신 축소 필요
규제대안2	거액여신 한도를 넘는 여신을 축소할 필요가 없음	거액 편중여신 리스크 관리 불가능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상호금융업권 등	건전성 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금융감독원	거액여신 도입 필요성에 도입	특이사항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조합의 건전성 강화 및 거액 편중여신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안1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

### 3. 규제목표

- ☐ 거액여신 도입을 통해 조합의 과도한 대출증가 및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상호금융기관은 금융기관과 같은 신용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
- ☐ 또한 상호금융업권 개별조합의 여신이 특정 차주·업종에 편중되어 경기변동 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수준의 거액여신 규제 도입 필요
- ☐ 따라서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례타당성 존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도 거액여신 규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음

#### 4. 비용편익 분석

##### <규제대안 1 : 거액여신 규제 도입>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9,524.89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거액여신 규제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9,524.89		19,524.8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9,524.89		19,524.89
기업순비용		19,524.89	연간균등순비용	2,942.57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년12월)를 통해 논의된 개선사항으로 신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은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되었던 규제차이 해소방안을 추진하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법 개정을 통해 거액여신 규제 도입 이후, 신탁 시행령에 세부내용을 규정할 계획

### 3. 종합결론

: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도입 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이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한 지역·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거액여신 규제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9,524.89		19,524.8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9,524.89		19,524.89
기업순비용		19,524.89	연간균등순비용	2,942.5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거액여신 규제 도입>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상호금융업권 조합
활동제목	대출규제에 따른 조합의 당기순이익 감소
비용항목	기타
비용	19,524,893,939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거액여신                      초과                      규모                      *                      손실률 *100,000,000(10,181*100,000,000*0.0285)
근거설명	<p><input type="checkbox"/> (영향 분석) '20년말 현재 <b>139개 조합</b>(전체 2,225개의 6.2%)이 <b>1조 181억원을 초과</b>하게 되어 해당 여신 축소 필요</p> <p>○ <b>신협 118개</b>(전체 신협의 13.4%) 조합이 총 <b>8,909억원</b>을 초과하며, <b>수협 12개</b>(13.3%, 887억원), <b>산림조합 9개</b>(6.5%, 385억원) 순(농협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영향) 한도 준수를 위해 1조 181억원의 대출자산을 축소하면 연간 최대 <b>29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 예상</b></p>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상호금융업권 조합원
활동제목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짐
편익항목	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부실가능성이 낮아져 지속적인 신용거래가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거액여신 도입으로 인해 조합의 건전성이 향상될 경우,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조합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어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는 효과 발생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								
	2.규제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의3, 제95조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의3, 제9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5 ~ 2021.05.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신탁법에 상호금융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7.규제내용	○ (현행) 신탁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조합”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 시행령(§18)에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업무용 부동산 범위*를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근거 미비  * 영업장, 사택, 기숙사, 연수원, 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 (개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신탁, 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신탁, 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td><td>4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탁, 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4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탁, 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4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상호금융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u>제83조</u>,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78조의3(부동산의 소유 제한) 중앙회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p> <p>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p> <p>④ ----- ----- ----- ----- ----- ----- <u>제78조의3, 제83조,</u> ----- ----- ----- -----.</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해야 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근거 마련
	내용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하지 않음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가 마련됨	없음
규제대안2	없음	법률상 근거없이 시행령에서만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규제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신협·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견 없음	원안대로 개정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하는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 3. 규제목표

- ☐ 현재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신탁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비례적 타당성 존재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 해당없음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 o 타법사례

☐ 새마을금고법 제31조에서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도록 규정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근거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근거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준비용		연간균등준비용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이미 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호금융업 중앙회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상호금융업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의견수렴을 통해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규정 마련

###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 신탁법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표 달성을 기대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근거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근거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활동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법적 근거 마련
편익항목	기존 중앙회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기존 중앙회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 간접적인 편익이 증대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2.규제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4.05 ~ 2021.05.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div>○ (현행) 조합이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만 탈퇴·제명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 에는 출자금이 전액 환급됨에 따라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div> <div>○ (개선) 출자금 환급청구시 일부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환급토록 개선</div> <div>* 현재 조합원 손실분담액 확정도 탈퇴제명 이후 즉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상 정확성을 위해 이를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토록 개선</div>									
	7.규제내용	<div>○ 출자금 환급청구시 일부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환급토록 개선</div>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div>○ 신용협동조합 880개</div>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신용협동조합</td><td>880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용협동조합	880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용협동조합	880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div>○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 출자금 환급청구시 조합원간 형평성 제고 가능</div>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59.37		759.3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759.37		0		100.28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조합은 <u>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u> 환급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u>다만, 출자금 환급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의 시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u></p> <p>② 조합은 <u>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말 조합의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u> 환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금 환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15년 신탁법 개정으로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손실해당액 차감)하여 출자금을 환급하도록 변경

- 그러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완전 자본잠식)로 규정하여 부분 자본잠식의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환급시기도 '지체 없이' 환급토록 규정하여 당해 사업연도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에 출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

\* (농·수·산림조합)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전부자본잠식인 조합만 출자금에서 손실부담을 빼고 환급
규제대안1	대안명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내용	일부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환급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규제대안1	출자금 환급기준이 개선되어 조합원간 형평성 제고	일부자본잠식으로 출자금 손실을 부담하는 조합이 대폭 확대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제도개선에 찬성	특이사항 없음
신용협동조합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신탁 조합원간 출자금 반환금 관련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안 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 3. 규제목표

- ☐ 조합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분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의 손실 해당액을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차감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신탁 조합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분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의 손실 해당액을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차감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아울러 출자금 환급시기를 경영실적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탈퇴·제명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하는 것으로,
  - 해당 신탁법 개정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 타법사례

: 농·수협외의 경우 정관으로 자본 부분 잠식의 경우에도 출자금의 손실 분담 규정을 적용(지분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59.37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59.37		759.3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759.37		759.37
기업순비용		759.37	연간균등순비용	100.28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입증위원회('20.5.15)를 통해 논의된 개선사항으로 신탁조합은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2. 규제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규제입증위원회회('20.5.15)에서 심의한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신협법 개정을 통해 출자금 환급방식을 변경한 이후, 신협 중앙회의 정관에 세부내용을 규정할 계획

### 3. 종합결론

: 신협법 개정을 통해 '부분 자본잠식'의 경우에도 조합의 손실 해당액을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차감하여 환급이 가능해져, 조합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책임 분담이 가능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59.37		759.3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759.37		759.37
기업순비용		759.37	연간균등순비용	100.28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일부자본잠식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활동제목	조합원 탈퇴,제명시 환급출자금 감소																											
비용항목	기타																											
비용	759,372,361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부분잠식조합 1인당 출자금 평균액* 50%* 탈퇴·제명 조합원 수(203,755*0.5*8,506)																											
근거설명	○ ‘20년말 기준, 자본 완전 잠식조합은 29조합, 부분 잠식 조합은 50조합으로 출자금 손실분담 조합 수가 대폭 확대																											
	<table><tr><th colspan="3">현행(자본 완전잠식) ①</th><th colspan="3">추진안(자본 부분잠식) ②</th><th colspan="3">적용대상 합계①+②</th></tr><tr><th>조합수</th><th>조합원</th><th>출자금*</th><th>조합수</th><th>조합원</th><th>출자금</th><th>조합수</th><th>조합원</th><th>출자금</th></tr><tr><td>29</td><td>201,476</td><td>144억원</td><td>50</td><td>269,932</td><td>550억원</td><td>79</td><td>471,408</td><td>694억원</td></tr></table>	현행(자본 완전잠식) ①			추진안(자본 부분잠식) ②			적용대상 합계①+②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29	201,476	144억원	50	269,932	550억원	79	471,408	694억원
	현행(자본 완전잠식) ①			추진안(자본 부분잠식) ②			적용대상 합계①+②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조합수	조합원	출자금																			
	29	201,476	144억원	50	269,932	550억원	79	471,408	694억원																			
* 출자금은 손실분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출자금만을 표시함																												
○ 20년 부분잠식조합에서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8,506명으로, 50%손해액이 발생하면 8.66억원의 출자금 환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부분잠식조합 1인당 출자금 평균액* 50%* 탈퇴·제명 조합원수 = 203,755*0.5*8,506= 866,570,099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신협 조합원
활동제목	부분자본잠식 조합도 손실부담부분을 제외하고 출자금을 환급
편익항목	조합원간 형평성 증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부분자본잠식 조합도 손실부담부분을 제외하고 출자금을 환급하여 조합원간 형평성 증대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법정적립금의 사용요건 완화									
	2.규제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5 ~ 2021.05.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신탁은 법정적립금을 분할·해산 이외 손실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농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 등으로 우선 충당이 가능  ○ (개선) 신탁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									
	7.규제내용	○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완화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신탁 조합 880개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신용협동조합</td><td>880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용협동조합	880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용협동조합	880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신탁 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법정적립금) ① ~ ② (생략) <u>&lt;신 설&gt;</u>	제49조(법정적립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u>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 잉여금, 특별적립금, <u>임의적립금</u> 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 ----- ----- <u>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u> -----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신탁도 타 상호금융관련 법령과 같이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손실의 보전을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하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 불허
	내용	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도록 허용
	내용	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하도록 허용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조합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서 법정적립금과 손실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 존재
규제대안1	법정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손실금의 처리가 용이하고 조합의 대외 신뢰도 제고 가능	없음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신용협동조합	의견수렴 결과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음	특이사항 없음
금융감독원	의견수렴 결과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음	특이사항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상법 및 농·수협법, 새마을금고법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및 불합리한 측면 해소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

## 3. 규제목표

- ☐ 법정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손실금의 처리가 용이하고 조합의 대외 신뢰도 제고 가능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법정적립금의 사용목적을 손실보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목적
- ☐ (규제수단) 상법 및 농·수협법, 새마을금고법 등 타 업권과 같이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 타법사례

- 상법 및 농·수협법, 새마을금고법 등에서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 손실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 불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 불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조합은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 허용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으며,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21.1월 신탁중앙회는 신탁 조합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것을 금융위에 건의

###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 신탁과 타 업권간의 법정적립금의 손실보전 가능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 손실금의 처리가 용이하고 조합의 대외 신뢰도 제고가 가능해지므로 해당 규제 완화는 적절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 불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 불허>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신용협동조합
활동제목	법정적립금의 손실보전 허용
편익항목	신협의 대외 신뢰도 증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input type="checkbox"/> 신탁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으로 보전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상 손실과 법정적립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사라져 조합의 대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 가능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업무보고서 제출의 법적근거 마련 등												
	2.규제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4.05 ~ 2021.05.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기존 MOU를 통해 제출받고 있던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83조의4)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7.규제내용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8.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농·수·산림조합 중앙회</td><td>3개</td></tr><tr><td>피규제자</td><td>농·수·산림조합</td><td>1,346개</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3개	피규제자	농·수·산림조합	1,346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3개												
피규제자	농·수·산림조합	1,346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의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 용	편 의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 ① ~ ③ (생략)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u>제84조</u> , 제89조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 ----- ----- ----- ----- ----- <u>제83조의4, 제84조</u> -----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금감원이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건전성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제출(§83조의4)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업무보고서 제출 근거를 법률에 마련
	내용	신협법 근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
규제대안2	대안명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
	내용	현행처럼 업무협약에 의해 업무보고서를 제출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법적근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	없음
규제대안2	없음	업무보고서 제출근거 미비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	특이사항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가 업무보고서 제출(§83조의4)을 업무 협약보다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합리적

### 3. 규제목표

- ☐ 금감원에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가 업무협약에 따라 이미 제출하고 있는 업무보고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탁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신탁법 제83조의4에 따라 신탁중앙회 및 신탁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준비용		연간균등준비용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농·수산·산림조합 및 중앙회는 이미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어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19대 국회에서 여러번 논의된 개정안으로, 업무보고서 제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감원이 금융위에 건의

##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 농·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탁법상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법적 근거 없이 업무보고서를 제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농수산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활동제목	금감원에 업무보고서 제출
편익항목	법적근거 마련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농·수산·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는 금감원에 이미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해당 기관의 업무보고서 제출이 법률에 명문화되는 효익 발생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중앙회 임원 중 선출직 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2.규제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2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5 ~  
2021.05.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선출이사(13명)는 전국단위로 선거에 입후보하여 대의원회 투표로 선출

- 선출이사의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는 등 협력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선출이사의 선거기간 중 다수 임원 후보자가 전국의 대의원 소속 조합(199개)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중앙회장이 아닌 이사선거도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

☐ (타기관 사례)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

->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1개 지역에서 1명의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선출이사의 숫자를 현재 13인에서 15인으로 증원(신협법상 임원은 25인(현행 21인) 이하로 둘 수 있으며 1/3이상은 전문이사(7인 ⇒ 9인으로 같이 증원)로 선출하도록 규정)

7.규제내용

☐ 선출이사의 선거 입후보 방식을 전국구에서 지역단위로 변경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회 의원 및 선출이사 입후보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선출이사 후보자	50명 이내
이해관계자	선출이사를 투표로 선출하는 대의원회 위원	199명

9.규제목표

☐ (조합·중앙회 협력 증진) 모든 지역에서 임원을 배출하여, 조합과 중앙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긴밀한 공조도 가능

		<input type="checkbox"/> (선거 과열 방지) 이사 후보자가 전국의 대의원 소속 조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과열을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 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중앙회장을 제외한다)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④ ~ ⑥</u> (생략)	<u>⑤ ~ ⑦</u> (현행 제4항에서 제6항과 같음)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현행 임원 선출방법)** 후보자가 동일한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인의 투표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한번에 선출 → 전국단위 선거
- ☐ **(지역 편중)** 해당지역 출신의 임원이 부재하는 경우, 중앙회로의 의견전달 및 중앙회와의 협력 등에 차질 우려

< 지역별 선출직 임원 분포 >

구분	서울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합계
'10~	2	2	3	1	3	1	-	-	1	-	13
'14~	3	1	1	1	2	2	-	1	1	1	13
'18~	2	2	2	2	-	2	-	1	1	1	13
<b>합계</b>	<b>7</b>	<b>5</b>	<b>6</b>	<b>4</b>	<b>5</b>	<b>5</b>	<b>-</b>	<b>2</b>	<b>3</b>	<b>2</b>	<b>39</b>

- ☐ **(후보자 파악 곤란)** 선거인 입장에서는 원격지에 소재한 조합 소속의 이사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선거’
- ☐ **(선거운동 과열)** 선거기간 중 다수 임원 후보자가 전국의 대의원 소속 조합(199개)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중앙회장이 아닌 이사선거도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
- ☐ **(타기관 사례)**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선출이사의 선거 과열양상 방지 및 조합·중앙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역별로 임원이 선출되는 것이 합리적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의원회, 선출이사 후보자	입법예고로 의견수렴 예정	특이사항 없음
신협중앙회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목표

☐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하여 조합·중앙회 사이간 협력 증대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지역별로 임원이 선출하는 근거를 신협법에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협중앙회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할 것으로

○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에도 동일한 제도가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

농업협동조합법
---------

<b>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b>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32.2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2.2		232.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32.2		232.2
기업순비용		232.2	연간균등순비용	30.66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조합 및 중앙회는 선출이사 선거방식 변경을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신탁중앙회의 건의 및 협의에 따라 선출이사의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신탁법 개정안 마련

###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 선출이사의 선출방식 변경을 통해 신탁 중앙회와 선출이사간의 협력관계가 증대될 것이므로,
- 신탁중앙회와 조합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2.2		232.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32.2		232.2
기업순비용		232.2	연간균등순비용	30.6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신탁중앙회																
활동제목	선거방식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및 지역별 이사 추천																
비용항목	기타																
비용	232,203,292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대의원) 308,000원×199명(308,000*199) (임원) 324,000원×18명(324,000*18) 장소대여비 5,000,000원×1회(5,000,000*1) 자료제작비 16,860원×230부(16,860*230) (선거인) 135,000원×876조합 (135,000*876) (투표관리자) 135,000원×3명×15회(135,000*3*15) (개표관리자) 135,000원×3명×15회(135,000*3*15) 장소대여비 3,000,000원×15회(3,000,000*15) 자료제작비(공보 등) 2,400원×900부(2400*900)																
근거설명	<b>1. 정관 개정에 따른 비용(임시대의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한 임시대의원회 개최</li> <li>○ 1회성 비용으로 정관변경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정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gt;</b>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산 출 근 거</th><th>비 용</th></tr> </thead> <tbody> <tr> <td>1. 대의원, 임원 여비</td><td>67,124,000</td></tr> <tr> <td>    - (대의원) 308,000원×199명</td><td>61,292,000</td></tr> <tr> <td>    - (임원) 324,000원×18명</td><td>5,832,000</td></tr> <tr> <td>2. 진행비(장소대여비, 자료제작비 등)</td><td>8,877,800</td></tr> <tr> <td>    - 장소대여비 5,000,000원×1회</td><td>5,000,000</td></tr> <tr> <td>    - 자료제작비 16,860원×230부</td><td>3,877,800</td></tr> <tr> <td><b>합 계</b></td><td><b>76,001,800</b></td></tr> </tbody> </table> <b>2. 지역별 임원 후보자 선출 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15개 지역) 1명의 선출이사 후보 추천시 비용</li> </ul>	산 출 근 거	비 용	1. 대의원, 임원 여비	67,124,000	- (대의원) 308,000원×199명	61,292,000	- (임원) 324,000원×18명	5,832,000	2. 진행비(장소대여비, 자료제작비 등)	8,877,800	- 장소대여비 5,000,000원×1회	5,000,000	- 자료제작비 16,860원×230부	3,877,800	<b>합 계</b>	<b>76,001,800</b>
산 출 근 거	비 용																
1. 대의원, 임원 여비	67,124,000																
- (대의원) 308,000원×199명	61,292,000																
- (임원) 324,000원×18명	5,832,000																
2. 진행비(장소대여비, 자료제작비 등)	8,877,800																
- 장소대여비 5,000,000원×1회	5,000,000																
- 자료제작비 16,860원×230부	3,877,800																
<b>합 계</b>	<b>76,001,800</b>																

	○ 임원 임기(4년)에 따라 4년 단위로 비용 발생(이사 권위시 보궐 비용 제외)	
	<b>&lt;임원 후보자 선출 추계 비용&gt;</b>	
	(단위 : 원)	
	<b>산 출 근 거</b>	<b>비 용</b>
	1. 선거인, 투표·개표관리자 여비	130,410,000
	- (선거인) 135,000원×876조합	118,260,000
	- (투표관리자) 135,000원×3명×15회	6,075,000
	- (개표관리자) 135,000원×3명×15회	6,075,000
	2. 진행비(장소대여비, 자료제작비 등)	47,160,000
	- 장소대여비 3,000,000원×15회	45,000,000
	- 자료제작비(공보 등) 2,400원×900부	2,160,000
	<b>합 계</b>	<b>177,570,000</b>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신용협동조합
활동제 목	모든지역에서 선출이사 배출 가능
편익항목	중앙회와 지역간 협력 증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모든 지역에서 임원을 배출하여, 조합과 중앙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긴밀한 공조도 가능